

“과학기술자들의 정책토론의 장 만들터”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에는 국내 과학기술인들이 정부 정책방향이나 부처통합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고, 정부와 민간, 그리고 학계, 산학연이 함께 하는 창조형 이노베이션,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녹색성장과 국가 발전방향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TEPI가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갑니다. 과학기술행정의 지난 1년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이 새로운 기초·원천·융복합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인재대국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학기술과 인력양성을 합친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과부 출범 초기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577 계획이 발표되고, 교과부가 청와대의 정책 실현 방침과 함께 하면서 초기의 부정적인 면이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글 | 이덕환 _ 본지 편집위원장 duckhwan@sogang.ac.kr

Q 늦었지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혁신 문제가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최근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 소홀히 취급되는 것 같아 정부나 국책

그 동안 우리는 모방형 또는 추격형 R&D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민간주도, 산학연 협동 등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하는 과학기술 창조형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현 교과부의 체제는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창조형 과학기술전략을 잘 수행하고 청와대에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녹색성장 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과부가 과거 과학기술부가 해왔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원장님께서 학부에서 토목공학을, 대학원 이후에는 행정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셨는데요. 매우 드문 경우 같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공과대학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공계 출신의 한계를 느껴 전공을 정치학으로 바꾸어 대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로서 지내던 중에 주위의 요청에 의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정부의 정책 기획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21세기 선진 강국이 되려면 과학기술국가, 문화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국가변동론'이라는 책까지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 의외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일부 큰 꿈을 꾸는 정치인들이 잠시 거쳐 가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이공계 출신 의원들까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고, 가능한 다른 상임위에 가려고 합니다. 17대 국회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지명하는 국회의원이 제일 적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가지마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1지명으로 택했고,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라든지 과학기술인 연금도입제 등 과학기술계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자임하고자 했습니다.

Q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과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요?

의정활동을 하며 공부하는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법부로서의 국회 기능을 많이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국회에서 낸 법안이 많이 통과되면서 언론에서 의원별로 성적을 매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지역구 출신인 제가 활동을 활발히 하니 전국구 의원들도 법안발의와 법안통과 경쟁을 하기 시작해 여야 없이 지난 4년 간 국회의원들끼리 정책을 연구하고 법안을 많이

내어 통과시키는 경쟁이 붙었던 것입니다. 제가 4년을 마감하면서도 법안을 낸 것이 전체 5위 안에 들었고, 통과시킨 건수는 아마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사이에 입법 활동 경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안에 대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법안의 문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다면 법안 심의에 밤을 샜 수밖에 없고 법안 도출을 위해서 수십 차례의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싸울 시간이 없는 것이죠.

아쉬웠던 점은 4년 동안 법안을 검토하고 만들며 문제점을 발굴해 내는 정책기능에 중점을 둔 나머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정무기능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의정활동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원장에 취임하신 후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는데, STEP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무엇입니까?

취임 후 현황을 파악해보니 연구주제가 넓게 분산돼 있고 주제별로 연구규모가 작았습니다. 연구원들도 여러 연구를 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과 개인 능력에만 집착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STEPI가 학습조직이라기보다는 개별 연구자들을 모아놓은 조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다이내믹한 과학기술정책전문 학습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입니다. 현대의 정책연구는 융·복합입니다. 주제가 하나라고 할지라도 기술경제와 경영, 공학, 법, 행정을 정책적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통합해서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신성장동력센터, 글로벌협력센터 등 주제별로 묶고 전공이 다른 연구원들을 섞었습니다. 22년 된 조직으로서 학습능력을 서로 배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또한 분리되어 있던 행정실과 기획조정실도 통합했습니다. 이전에는 행정실이 원장에게만 직속돼 있어 행정실과 연구인력 간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존재했었습니다.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주제도 몇 개로 압축해 집중하는 STEPI의 브랜드 과제는 'STAR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2009년에 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4개의 프로젝트는 신성장동력에 관한 것, 녹색성장과 과학기술혁신정책, 미래과학기술전략에 대한 창의적 기초원천연구 진흥 추진전략, 남북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것 등입니다. 규모도 크고 인력과 연구단도 기존 조직을 뛰어넘는 여러 조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것입니다.



Q 신성장동력, 녹색성장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창의적인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 동안은 우리나라가 창의적 기초연구에는 많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응용연구에 치중하여 과학에 대한 창의적 기초 연구보다는 추격형 모방 기술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선진 외국을 모방해서 빨리 따라가는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되면서 우리가 프린터 사업을 벌이고, 몇몇 기관에서 와이브로나 CDMA 등 새로운 원천기술을 만들면서 기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창의적인 연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초과학기술을 다루는 대학과 생산 현장과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학이나 기초·응용연구기관과 벤처나 생산 현장을 잇는 연결고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기초연구는 선진국일수록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고, 있다하더라도 대학이나 연구자들이 분산돼 있다 보니 연구 성과를 크게 못 거뒀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577전략을 내놓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새롭게 하자며 몇 조 원을 투입하는 것은 창의적인 기초과학연구의 시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기초과학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대학의 인력들이나 창의적인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단이 꾸려지고 새로운 연구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창의적인 기초연구는 장기간을 요구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5조 원에

서 10조 원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5~10년이 지나면 적게는 몇 배에서 크게는 몇 십 배의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로는 1999년부터 시작한 프린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23개 주제로 진행된 프린터 사업은 지난 연말에 중간평가를 해보니 2조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 적게는 30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 정도의 성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프린터 사업보다 몇 배 크기 때문에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킨다면 기초연구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알리거나 심지어는 과장해서라도 알리는데 과학기술계는 성과에 대한 평가나 확산이 있는 것도 제대로 정책결정자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 성과를 앞장서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덕단지나 과학자들의 순수한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통해주는 역할이 우리 STEPI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초 또는 응용 과학기술연구를 최대한 국민에게 소통시키고 국회나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Q 과학기술계에서 항상 아쉽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다양합니다. 연구성과를 내라, 인재를 양성하라, 성과를 확산하고 책임을 져라, 광우병 등 사회적인 이슈에도 직접 참여하라는 등 과학기술자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또한 언젠가부터 과학기술계 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하는 분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정책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992년에 한국정책학회를 창립해 연구이사를 하면서 각 분과학회

를 만들어 한국의 정책연구를 활성화시켜보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과학기술 분야는 전공하는 사람이 열손가락에도 안들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많습니 다만 그 분들이 경영학자인지, 경제학자인지, 사회학자인지, 행정학자인지, 정치학자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융·복합연구를 통해서 STEPI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가 되도록 상호학습을 통한 인재양성을 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STEPI나 KISTEP과 같은 정책전문연구기관은 실제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정책이라는 정치권력의 의사결정 산물로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매개 역할을 잘하면 양 집단 사이에 소통이 잘 됩니다. 그 역할을 잘못하고 어느 일방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일방의 수요에만 부응할 때는 전체가 따로 놀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 불행히도 과거에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과기부를 부총리부서로 만들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며 모든 부처의 과학기술혁신을 모두 과기부에 배치시키는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할을 과학기술 커뮤니티가 해야 합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보직자들, 즉 원장이나 부원장 등은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닙니다. 이공계 국책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기관장들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완하고 자극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가 또는 정책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우는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코스가 없습니다. 최근 몇몇 대학이 과학기술 최고지도자 과정을 만들고 있지만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과학기술 최고지도자들이 많아지면 이공계 연구현장과 국가 의사결정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STEPI가 앞으로 과학기술계의 여론지도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새롭게 창조해야 할 과학기술분야와 과학기술계의 구성원들을 연결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또 그것을 사이버 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투자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STEPI가 확보하고 있는 3만 명 정도의 사이버 커뮤니티를 앞으로 40만 명을 목표로 확대해서 과학기술자들의 공동의 정책토론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들은 국회나 정부에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사이버 상의 공론이 국가과학기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대학에 오래 계셨고 또 기획처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대학 문제를 여쭙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대학을 보는 입장인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우리나라 대학이 다들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지만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 방침은 대학교육도 시장경쟁으로 가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하라고 하지만 대학 경영자에게는 퇴출의 탈출구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사학재단을 만들어 운영을 하던 사람들이 손을 털고 나가면 다른 기관이 인수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보장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 모든 대학 경영자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스스로 하나의 기준에 얽매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학부제 같은 경우, 전국 200여개 대학 가운데 학부제를 해야 할 대학은 많아야 30~50개 정도밖에 안됐는데, 학부제를 해야 대학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대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든 학과든 교수가 최소 70~80명은 돼야 교육과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대학이 특성화하고 전문화하면서 대학을 개방해 상호 경쟁하는 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강의나 원어민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제회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과학기술계에는 유능한 인재가 매우 많지만 이들이 실제 정책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가 생각을 함께하는 인식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1960~80년대 산업화 시대와 90년대 정보화시대에 과학기술인들이 큰 역할을 했듯이 이제 막 출범한 녹색혁명의 시대, 새로운 제4, 제5의 과학혁명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고 국민들의 삶의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